

‘사회투자가족’의 위기: 세계화, 가족문화, 학력투쟁*

장경섭**

이 논문은 한국의 대외 종속적 근대화와 세계화의 과정에서 교육이 핵심적 사회 동원 및 통합의 기제로 자리잡게 되고 이에 대응해 한국인들이 가족 단위의 교육 투자 및 경쟁에 치열하게 임해 온 현상을 ‘사회투자가족’(social investment family)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해석하고자 한다. 사회투자가족은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의 이념적 스승으로 불리는 앤서니 기든스가 사회민주주의의 재확립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제시한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지적 기반을 갖추는데 사적 가족의 적극적인 교육투자가 핵심적 역할을 했음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든스가 제시한 사회투자국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대비해 사회투자가족의 개념을 한국적 맥락에서 설명했다. 둘째, 한국인들의 개별 가족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나아가 정치적 성취와 관련해 교육의 핵심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역사적 및 사회적 맥락에 대해 설명했다. 셋째, 한국 가족들의 적극적 교육 투자 및 경쟁 행위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몇 가지 특징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경제위기 및 이에 대응한 개혁이 한편으로 사회투자가족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사회투자가족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 글은 태평양장학문화재단의 2001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내용이 부분적으로 한국사회사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대전 충남대)와 2002년도 세계사회학대회(호주 브리즈베인)에서 발표되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관심분야는 비교근대성론, 가족정책론, 중국사회론이다(연락처: 02-880-6410, e-mail: changks@snu.ac.kr).

1. 서론

불과 사오십 년 동안에 서구에서 이삼 세기에 해당하는 사회변동을 압축적으로 경험해 온 한국인들이지만 유독 가족주의는 변함없는 특성으로 남아 있다. 식민 지배, 전쟁, 전후 혼란, 산업화로 이어지는 역사적 격랑 속에서 한국인들은 자신의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보호를 위해 국가와 사회공동체에 제대로 기댈 수 없었다. 그 대신 가족을 중심으로 갖가지 위기에 대처하고 새로운 기회를 개척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21세기를 맞은 한국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등 새로운 조류의 사회변동을 겪으며 질적으로 매우 급격하게 변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생활과 사회 질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직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예측하기가 어렵다(Robertson, 1992; Mittelman, 2000).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한국인들이 여전히 매우 가족 중심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다양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가족문화들을 소화시키는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사회변화들에 대응해 나가리라는 것이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정치권의 선도로 국내에 세계화 이데올로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에야 한국인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화의 풍랑에 휩쓸려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궁극적으로는 1997년의 환란과 이를 빌미로 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에서 강요된 경제·사회적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인들은 그동안 이룩한 획기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해 외세의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적 차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권력에 더욱 심하게 노출되고 영향받으며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박길성, 1996).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한국인들이 그것에 적절히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외연적이고 거시적인 흐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변화와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기울여지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실제 적응은 갖가지 미시적 차원의 자원과 관계를 동원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지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이른바 'IMF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대다수 실직자들이 주로 가족 차원의 협력과 희생을

통해 생활위기를 넘겨야 했다. 그런데 가족 차원에서의 위기 극복도 여의치 못한 사람들은 일가족 동반자살 같은 충격적 일을 감행했으며, 가족이 뭉쳐 생활위기를 버텨내던 사람들도 고통이 길어짐에 따라 심리적 및 경제적 압박으로 가족해체에 이르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일반 시민들의 삶의 과정에서는 세계화가 곧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의 재편으로 표출된다.¹⁾

세계화와 가족문화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는 영역이 교육이다. 새삼스러운 지적이지만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여러 국내외 연구자들은 교육이 한국의 경제발전, 정치민주화 등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특히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급속한 대외지향적 경제발전은 거의 유일한 자원인 노동력, 즉 인적 자원을 범사회적으로 동원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인적 자원의 우수성은 사회병리에 가까운 엄청난 교육열을 통해서 확보된 것이다. 처음부터 대외지향적 성격을 띠었던 경제발전은 이처럼 잘 교육받은 노동력을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생산, 건설, 기획, 관리, 판매 업무에 효율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현대 한국의 경제발전사는 교육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세계화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교육체제의 핵심적 특징의 하나는 공공 교육투자에 비한 사적 교육투자의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경제발전 초기는 물론이고 공공 교육지출의 획기적 증대가 모든 정권의 정치구호처럼 된 최근에도 교육투자의 핵심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사(私)적 가족들이다. 교육을 새로운 대외지향적 산업문명의 참가 요건으로 인식한 한국인들은 스스로의 수학기회가 여의치 않으면 자녀와 형제의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자세를 지녀왔다. 급속한 경제발전은 거의 완전고용과 급속한 임금 상승을 가능케 하여 이처럼 잘 교육받은 한국인들에게 보상해 왔다.

이러한 교육을 통한 한국 가족의 경제적 세계화에의 참여는 최근 중대한 위기와 변화를 겪게 되었다. 환란과 IMF 관리체제가 야기한 경제위기는 사회 전반에 대량 실업과 고용조건 악화를 초래했고 특히 신규 취업시장의 붕괴에 직면한 청

1) 여기에 문화적 세계화의 과정에서 기업과 매체가 유포하는 서구적 가족문화에 노출됨으로써 한국인들의 가족과 가정은 더욱 복잡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장경섭, 2001).

년세대는 그동안의 교육투자에 대해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그리고 서민층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생계불안은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를 포기하는 계층의 범위를 넓혀 이른바 '교실붕괴'의 중요한 원인 하나를 제공했다. 교육을 통해 국가가 사회를 경제발전에 동원하고 가족이 경제발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학력에 비례한 양호한 고용체계의 제공이 필수적이지만 고용체계의 교란이 구조화되어 가는 경제환경에서 한국인들은 엄청난 혼돈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구조적 빈곤의 확산은 수많은 한국 가족의 교육투자 여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선택한 이른바 '지식기반경제'의 확립은 또다시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물론 지식기반경제는 고부가가치 지식의 산출을 위한 고등 교육·연구에의 획기적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이전의 산업화 단계에서 강조되었던 대중적 교육수준 향상과는 차이가 있지만 한국인들은 21세기에 또다시 교육을 국가적 화두로 맞게 되었다. 그러나 빈부격차의 급격한 확대와 사교육비 부담의 폭발적 증대는 그러한 국가적 화두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층의 비율을 어느 때보다도 제한하고 있다. 고질적 생계불안으로 자녀에 대한 관리여력을 상실한 수많은 빈곤층 가족은 물론이고 심지어 상당수 중산층조차도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전에 없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입시체계가 좌절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좌절과 혼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서 대두된 것이 수많은 중산층 가족들의 이른바 '교육이민' 행렬이다. 이는 세계화와 한국의 가족문화가 상호작용하는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대외 종속적 근대화와 세계화의 과정에서 교육이 핵심적 사회 동원 및 통합의 기제로 자리잡게 되고 이에 대응해 한국인들이 가족 단위의 교육 투자 및 경쟁에 치열하게 임해 온 현상을 '사회투자가족' (social investment family)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해석하고자 한다. 사회투자가족은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의 이념적 스승으로 불리는 앤서니 기든스(Giddens, 1998)가 사회민주주의의 재확립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제시한 '사회투자국가' (social investment stat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지적 기반을 갖추는데 사적 가족의 적극적인 교육투자가 핵심적 역할을 했음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지는 절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든스가 제시한 사회투자국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대비해 사회투자가족의 개념을 한국적 맥락에서 설명했다. 둘째, 한국인들의 개별 가족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나아가 정치적 성취와 관련해 교육의 핵심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역사적 및 사회적 맥락에 대해 설명했다. 셋째, 한국 가족들의 적극적 교육 투자 및 경쟁 행위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몇 가지 특징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경제위기 및 이에 대응한 개혁이 한편으로 사회투자가족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사회투자가족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2. 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가족

다수의 서구 정치인, 학자, 언론인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들의 교육열을 이 지역 전반의 경제발전에 대한 핵심 요인으로서 인식하며 나아가 자신들 사회의 발전을 위한 교훈으로 삼고 싶어한다(e.g., Khan, 1979; Vogel, 1991; McCormick, 2001). 이른바 ‘인적 자본’ (human capital) 개념은 높은 교육동기를 가진 인구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핵심 단서를 제공한다. 교육투자는 경제발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고 간주된다. 비록 한국, 일본, 중국 등이 운영해 온 공교육의 질과 내용이 때로 문제시되기는 하지만(김경동, 1998), 교육적 성취에 대한 시민과 정부의 공통된 열의는 매우 바람직한 국가적 특징으로 평가되어 왔다.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이른바 ‘제3의 길’ (the third way)의 핵심 과제로서 ‘사회투자국가’ (social investment state)를 제시할 때, 교육에 대한 동아시아인들의 열의 및 이에 기초한 경제발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의 판단에 따르면:

재분배가 사회민주주의의 의제에서 사라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사민주의자들의 최근 논의는 매우 적절히 ‘가능성의 재분배’로 강조점을 옮겼다. 가능한 한 인간의 잠재력 개발이 ‘사후’ 재분배를 대체해야 한다(Giddens, 1998: 100-101).

교육과 훈련이 사민주의 정치가들의 새로운 노래가 되었다. 널리 알려졌듯이 토니 블레어는 정부에 있어 그의 세 가지 우선 사안을 '교육, 교육, 교육'으로 설명했다. 대다수 산업국가들에서, 특히 빈곤집단들과 관련해서는, 향상된 교육수준과 기술훈련의 필요성이 분명하다. 어떤 사회에서나 잘 교육받은 인구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 교육에의 투자는 오늘날 정부의 필수이며, '가능성의 재분배'를 위한 기초이다(Giddens, 1998: 109).

기든스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복지국가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비버리지가 1942년에 그의 『사회보험과 연합서비스에 관한 보고서』를 썼을 때, 그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다시 말해, 그의 초점은 거의 전부 부정적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정부뿐 아니라 개인들 자신과 다른 주체들이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복지 창출에 기능적인 긍정적 복지를 생각해야 한다(Giddens, 1998:117).

지침은 경제적 생존을 위한 직접적 지원이 아니라 가능하면 언제든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이다. 우리는 복지국가의 자리에 긍정적 복지사회에 작동하는 사회투자국가를 대체해야 한다(Giddens, 1998:117).

비록 기든스가 교육에 대한 정부의 공적 투자를 강조하지만, 그의 노선은 지금까지 가족 내 자원을 당장의 쾌락을 위한 물질적 소비에 탕진하는 대신 자녀교육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해 온 한국 등 동아시아의 부모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정부들은 기든스 주장에 명시적으로 동의는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정책노선을 위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들 정부는 복지든 교육이든 사회부문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꺼려왔기 때문이다.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경제강국들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초를 다져온 것은 사회투자국가가 아니라 '사회투자가족' (social investment family)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개인생활과 사회구조가 갖는 가족중심적 성격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치 않다(Chang, 1997). '도구적 가족주의' (instrumental familism)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이념을 가진 한국 가족들은 성원들의 경제적, 사

회적, 정치적 경쟁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장경섭, 2001). 훌륭한 가족이란 성원들의 사회적 성취와 출세를 위한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족이며, 성원들의 사회적 성공은 다시 전체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것이다. 특히 한국인들은 본인 자신뿐 아니라 자녀, 형제의 교육적 성취를 위해 가족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을 가장 현명한 가족 단위의 집합행위로 이해해 왔다.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교육에 대한 투자가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가족전략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투자가족이 20세기 한국 가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었으며, 한국의 교육투자는 국가가 아니라 사적 가족이 주도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투자가족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최근 영국에서 발생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두 아들이 명문 사립학교 교사들로부터 과외수업을 받는 것이 드러나 영국 정계와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문화일보』, 2002/7/5). 공립고교생인 두 아들은 대입 예비과정의 역사과목 과외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야당은 블레어 총리가 공교육제도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 사건은 한국인들에게 특히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으로는 ‘사회투자국가’를 자신의 제3의 길 노선의 핵심으로 주창하는 영국 총리가 개인적으로는 자녀 사교육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대다수 한국인들처럼 ‘사회투자가족’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자녀의 교육문제로 극단적 고통을 받고 있는 대다수 한국인들이 블레어 총리를 웬만큼 이해할 것처럼 영국 내에서도 그의 딱한 부모 노릇에 대해 일부 동정 여론이 있었다.

3. 교육, 가족, 한국적 근대성

1) 종속적 근대성과 교육

사회혁명을 거치지 않고 근대 문명을 확립하려고 노력해 온 나라들에는 근대적 직업, 계급, 조직, 활동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독특한 사회적 조건과 기제들이 필요하다. 대다수 서구 사회들에서는 정치 및 경제 질서의 근본적 혁명을 통해 부르

주아 계급이 현대적 산업과 정부를 개발하고 운영해 왔다. 반면 한국에서는 근대적 정치, 경제, 사회 질서를 새로 창출하려는 자생적 노력들이 내부 저항과 외세 압력으로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고, 대신 일본과 미국의 식민지배에 의해 자율적 근대화와 국가발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왜곡된 사회질서가 남았다. 한국전쟁도 전통적 계급구조의 물질적 유제들을 대부분 제거했지만 근대성의 추구에 적합한 대안적 사회구조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공백 속에서, 사회집단들이 계급이익을 확대하고 계층상승을 추진하며 국가가 사회집단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핵심적 기제로서 공교육이 떠올랐다. 공교육은 정치, 행정, 사법, 산업, 전문업, 문화 등의 근대화 프로젝트에 대한 참가자격을 결정짓는 중요성을 가졌다. 무학 혹은 저학력은 단순히 문맹, 천한 직업, 낮은 임금으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새로운 문명으로부터의 근본적 소외를 의미했다. 그리고 학교는 근대화 지식을 공동으로 습득하는 장으로서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의 현실적 경쟁과정에서 인적 연계망을 제공하는 기능도 맡았다(김경동, 1998).

해방 후 한국사회가 추구한 새 문명은 한국인들 스스로가 자율적이고 성찰적으로 상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로 미국인들에 의해 주어지거나 때로는 강요된 것으로 이른바 종속적 근대화의 지표였다. 이때 공교육은 한국인들을 미국문명에 대한 학습과 체화의 과정으로 편입시키는 주된 통로였다. 따라서 토착적 학습교재를 사용해 전통적 혹은 지역적 지식을 교육시키는 민간 교육체계는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공식 교육체계에서 배제되었다.²⁾ 오직 공교육을 통해서만 한국인들은 그들의 삶을 규정하게 된 새로운 (미국적) 목표, 전제,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³⁾ 특히 거의 일순간에 한국에 이식된 미국식의 정치·경

2) 서구 지향적 근대화 과정에서 토착 지식·교육 체계에 대한 문화적 폄하는 흔히 발생하는 현상인데, 특히 일제,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이의 습득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던 세대에 의해 국가와 사회가 주도되면서 토착 지식·교육 체계는 급속히 도태되었다. 이 현상은 일종의 동양주의(orientalism: Said, 1979)적 태도가 한국인들 자신에 의해 체득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3) 이미 학령(學齡)을 지난 성인들에 대해서는 정부 캠페인이나 대중매체가 대체 역할을 맡았다.

제 체제는 한국의 정치, 행정, 기업 엘리트로 하여금 미국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시급히 학습하도록 요구했다. 많은 여유계층 인물들이 미국 유학길에 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고, 국가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여러 인재들을 주로 미국으로 유학시켰다. 이렇게 국내외 학교교육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과 자격은 정부, 기업, 대학, 언론 활동의 주류를 형성해 한국의 근대화를 미국지향적으로 이끄는 핵심적 요인이 되었다(Amsden, 1989).

이처럼 사회혁명의 부재와 대의종속적 근대화가 교육에 대해 엄청난 역사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가운데 한국은 자본주의적 계급투쟁 사회 이상으로 기능주의적 ‘학력투쟁’(educational credential struggle) 사회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흔히 학벌주의라는 말로 지칭되기도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단순히 지적 훈련의 정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정치·사회·문화적 위계상의 위치를 가리킨다.⁴⁾ 따라서 자신이나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식이라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개인적 지향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사회계급적 위치의 확보와 상승을 위한 사회적 투쟁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대미 종속적 근대화 혹은 세계화라는 한국의 독특한 역사현실에서 나온 치열한 집단적 계급행위이며,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리 원칙은 기회의 확대 이상으로 기회의 공정 분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⁵⁾

2) 교육을 통한 계급 형성

공교육이 사회적 자원과 욕구를 경제, 정치, 사회의 발전과정으로 투입하는 기

4) 물론 교육에 의한 사회 불평등과 차별의 야기는 한국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는 서구 사회학의 고전적 연구주제 가운데 하나로 자본주의 사회계층 현상의 핵심적 인자로서 널리 취급되어 왔다. 심지어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교육에 의한 불평등, 차별, 소외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거나 인식되어, 모택동은 문화혁명 와중에 아예 (고등) 공교육을 폐지하려 들기도 했다(구자역, 1999).

5) 예컨대, 대학 기여입학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그토록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것이나 정부의 정책적 입장에 대해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비상한 관심을 표명해 온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최근 서울대학교가 신입생 지역할당제를 추진하면서 사회 전체가 민감한 반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문화일보』, 2002/8/14).

본 통로가 됨에 따라, 현대적 계급 형성도 개인과 가족 차원의 교육 투자 및 경쟁에 의해 결정적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 현상은 우선 이른바 신중간계급, 즉 교육 자격에 의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한 관리·기술·전문직 노동자들에게 해당되지만 대다수 정치·경제적 지배엘리트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순수 농촌지역을 제외한다면 교육을 전혀 혹은 거의 받지 못한(비노년 세대) 사람들은 산업화 진척 과정에서 그 자체로(소외가 핵심적 계급 성격인) 사회계급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정치 엘리트를 보면, 학력이 정치권력의 중심부와 관련한 인정 및 연결 수단이 되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미국 학력이 해방 직후의 정치공간에서 미군 사정부를 다루는 데 전략적 이점을 제공했다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심지어 일제시대 일본과 국내에서 쌓은 학력도 거의 차별 없이 정치·행정 엘리트 층원에 반영되었다. 이후 군사독재기에는 이른바 ‘육법당(陸法黨)’으로 일컬어지는 학력·학연 집단이 한국의 정치와 행정을 독점해 나갔으며, 이는 육사와 서울 법대의 높은 입시경쟁률에 반영되기도 했다.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후에는 지역대립적 정치구도가 지역별 유명 고등학교 동문집단이 중앙의 정치무대를 휩쓰는 현상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학력 위조가 수많은 정치인들의 습관적 행위가 되었다. 이처럼 정치 엘리트 형성에 학력과 학연이 중요한 것은 정치인 양성 제도로서의 정당들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고 취약했다는 사실에 연결되어 있다. 기층 사회의 정치적 욕구와 주장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이념과 정책으로 개발하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력정치인 집단을 육성하는 성격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 정당은 만성적인 전문정치인 부족을 학계, 관계, 언론계, 심지어 문화계의 고학력 엘리트 등용으로 메웠다. 이에 따라 각 전문·관리직 내부에서 일부 인사들의 정계 유착이나 진출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⁶⁾ 학력과 학연이 전문적 정치경력을 대신하는 현상은 김영삼·김대중 양김(兩金)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민주투사’ 정치인 시대가 막을 내리는 최근에 더욱 강화되는 조짐까지 보인다.

6) 이런 맥락에서 선거철이나 권력교체기에 고위 관료들의 공공연한 정치적 줄서기, 언론의 파당적 편향 보도, 학계·문화계 인사들의 공공연한 선거운동 등이 벌어진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행정 및 사법 엘리트의 형성이다. 행정관료, 판·검사, 심지어 외교관을 선발하는 국가고시까지도 기본적으로는 지원자의 대학 수업 교재에 대한 기억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국가 엘리트를 뽑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몇몇 일류대학에서 법, 행정, 경제 등을 공부해야 하며, 그러한 일류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사를 건 입시공부에 매달려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역설적인 현상은 대학의 수업교재에 대한 전략적 학습이 대학 강의실보다는 학원이나 고시원에서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대학은 국가 엘리트에 대한 교육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졸업한 대학 자체가 주는 정치·사회적 위상이나 동문 학연이 국가 엘리트 내부의 경쟁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⁷⁾

전문관리자와 재벌 후계자를 포함한 기업엘리트의 형성도 공교육에 크게 의존한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자들이 대기업 고위 관리층의 대다수를 점한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조사된 바 있다(『디지털조선일보』, 2002/5/2). 대다수 재벌 후계자들도 이들 대학이나 유명 구미 대학들을 다녔다. 한국의 재벌 후계자들은 기업 소유뿐 아니라 기업 경영까지 통괄하기 때문에(조동성, 1991), 그 부모인 재벌 총수들은 자식들에게 강도와 수준이 높은 교육을 받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은 상당히 성공적이어서 재벌가 자녀의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다(『디지털조선일보』, 2002/3/12). 재벌 총수들은 기업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라는 강력한 정치·사회적 압력에 저항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상속자에 대한 적극적 교육투자를 해 왔다.

의사, 약사, 변호사, 교수, 과학자, 예술가, 문인, 엔지니어 등 전문직 역시 공교육체계에 의거해 형성되어 왔다. 물론 이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전문직의 이른바 ‘사회적 형성’(social construction)이라는 역사적 과정이 결여된 한국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들 전문직의 존재는 장기간의 지적 탐색과 사회적 투쟁의 역사적 결과물이 아니라 식민지배와 종속적 근대화의 우발적 파생물이다. 이

7) 최근 각종 고시제도 개혁 및 법학 전문대학원(law school) 도입이 꾸준히 거론되지만, 기존의 고시 출신 사법·행정 엘리트들의 집단적인 저항과 비협조로 추진이 좌절되고 있다(『문화일보』, 1999/5/18). 이는 대학교육을 전문지식의 습득 기회보다는 출세를 위한 형식수단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

러한 전문직의 정의 자체가 공식적 교육자격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교육자격은 서구 기준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답습한 것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의대 입학정원 증감과 같은 관련 교육자격자 수의 통제 문제에서부터 최근 관련 전문직 단체와 대학의 집요한 반발에 직면한 법대 및 의대 전문대학원 같은 교육방식 문제에 이르기까지 교육제도의 변화에 대한 관련 전문가 집단의 관심과 압력은 가히 엄청나다. 다시 말해, 지적 각성이나 사회적 투쟁이 아닌 형식적 교육자격이 이들 전문직을 만들어 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전문직 사회조직들은 배타적 이해관계의 추구를 위한 로비조직 이상의 사회적 기능이나 위상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⁸⁾

공교육은 이상에서 말한 상층 계급들의 형성에만 기여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제조·서비스업의 노동자 형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고등학교, 대학교는 일반 노동자들에게 지적·기능적 기본 자질만 부여한 것이 아니라 노동인구를 노동력이 필요한 지역과 산업으로 재배치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 농촌의 현재 및 미래 유희노동력의 도시로의 재배치를 위해(cf. Lewis, 1954) 도시의 고등교육기관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시지역에 위치한 대학들은 예비노동자들의 교육·훈련 및 지역 재배치의 기능을 결합해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산업노동력 형성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차원에서 특히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산업화 및 도시화는 경제·사회·정치 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졌는데 비수도권 대학들 및 그 졸업생들은 이러한 자원으로 부터 소외되는 현상이 고질화되었다. 물론 지방대학 졸업생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경제적 난관을 겪어 온 집단은 저학력층이다. 학력별 임금 격차 및 산업 배치가 세계 어떤 나라에 못지 않게 뚜렷한 한국에서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웬만큼 처우를 받는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대학 진학이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한국의 경제구조가 첨단제조업, 정보산업, 전문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외국자본의 전방위 진출이 현실화하여 기업의 소유구조 및 경영형태가

8)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정책에 찬성한 인물들에 대해 협회 회원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처분까지 벌였다. 이는 대다수 전문직 단체가 '사회적 형성'의 과정이 결여된 이익집단으로서 사회적 평판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의 실례이다(『교수신문』, 2002/10/19).

다양화되자 대학교육의 전문화 및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자신의 전공영역을 불리하게 여기는 다수의 대학졸업자가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현상도 생겨났고, 아울러 조기 해외유학, 대학생 어학연수, 외국 대학원 진학이 급증했다. 지식·정보화와 세계화라는 21세기의 사회·경제적 조류 역시 교육 기간의 연장 및 교육 내용의 다양화라는 교육적 대응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어도 재정적 여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고도화된 21세기 경제구조에 적응하는 방법 역시 교육에 대한 투자이다.

3) 교육과 문화계층화

한국사회는 식민지배, 전쟁, 자본주의 산업화, 정치민주화 등으로 봉건적 사회 질서의 물적 기초가 거의 전부 깨졌지만 여전히 강한 문화적 위계질서 의식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적 및 현실적 이유로 인해, 한국인들은 서구적 제도, 가치, 관행을 매우 급속하게 받아 들였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러한 서구적 요소들의 문화적, 철학적 혹은 이념적 기초에 대한 천착과 내재화에 뚜렷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Chang, 1999a). 문화적 혹은 정신적으로 현대 한국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을 매우 닮아 있다. 특히 교육(학습)을 통해 얻어진 문화적 자산을 사회적 지위의 핵심적 상징물로 간주하는 유교적 사회관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경동, 1998).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졸업장은 최근까지도 ‘현대적 양반계급’의 기본 요건으로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든 한국인들에게 불문의 목표가 되었으며 근자에는 거의 대다수 고교생이 진학하는 보통교육 제도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유교적 사회질서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한국 여성들은 경제, 정치, 사회 발전의 과정에서 주류집단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심하게 차별을 받아 왔다. 위에서 설명한 교육을 통한 정치, 행정, 기업, 전문업, 산업 계급의 형성은 극히 남성지배적인 과정이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대다수는 저학력자이며 정치·사회 활동에서는 여성들의 존재 자체가 희소하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교육수준이 훨씬 낮아서 생긴 것이 아니다. 전반적인 저소득 단계에서 한국의 가족들은 딸보다는 아들의 교육을 우선했지만 소득 상승과 함께

남녀가 모두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 정치, 사회 활동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보다 이들의 자력에 걸맞는 활동기회가 드물다는 것이다. 그들의 높은 교육자격이 그들을 노동시장 등에서 오히려 실격시키는 모순이 발생해 왔다.

자신들의 교육에 대한 직업적 보상 전망이 어둡기만 하지만 대다수 여성들은 여건만 허락하면 여전히 대학 진학을 원한다. 이는 문화적 위계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여성들에게 문화적 위계상의 지위는 심리적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용도가 있다. 즉, 결혼시장에서 여성의 교육수준은 핵심적 경쟁조건으로 작용한다. 대학졸업장 없는 여성이 기업, 국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성공한 혹은 유망한 인재와 결혼하기는 매우 어렵다. (물론 남성에게도 교육수준은 중요한 배우자 조건으로 작용하지만 이에 덧붙여 실제 직업적 지위가 그보다 훨씬 중요하다.) 교육차별적 혼인시장은 한국사회의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Park, 1991). 이에 따라 한국의 부모들은 비록 딸들이 그들의 학력에 걸맞는 경제, 정치, 사회 활동을 통해 정당한 직업적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들 교육에 못지않게 딸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다.

4. 한국의 사회투자가족과 입시경찰국가

최근 홍콩의 국제 자문조직인 정치경제위험자문기구(The 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PERC)가 아시아 각국의 외국인 경영자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이 싱가포르, 일본 등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노동자들의 교육자질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다(*Japan Times*, 3 September 2001, p. 1). 이 조사는 양질의 생산노동력 존재여부, 높은 수준의 관리·사무 인력의 존재여부와 비용, 노동인구의 영여 구사력과 대체적 기술수준, 생산노동력의 단가, 교육제도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는데, 여기에서 한국이 경제발전 수준에서 월등히 앞서 있는 일본과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싱가포르를 앞섰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것이다. PERC는 아시아 지역 전체가 노동력의 높은 교육자질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한국이 선두에 서있다는 것은 곧 세계적

인 차원에서 한국 노동력의 수준이 정상급임을 의미한다.⁹⁾ 이러한 고무적인 결과에 대해 한국에서 국가, 가족(개인), 기업, 학교 가운데 가족이 압도적인 기여를 했다고 단정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대다수 중산층 가정에서 자녀의 입시준비와 관련된 사교육비가 일상 가계지출의 최대 항목이며 심지어 수많은 전업주부들이 자녀 과외비를 마련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부업이나 취업에 나섰다. 농민가족들까지도 대부분 여유소득을 도시나 읍내로 나간 자녀들의 교육비에 사용해 왔다.¹⁰⁾ 심지어 농업 증산과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농가 지원금도 상당 부분 도시지역의 자녀 교육비로 전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공교육은 이러한 사적 가족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아낌없는 재정적 투자와 정신적 후원에 결정적으로 의존해 왔다. 비록 학력투쟁이라는 사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입시병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하지만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집합적으로는 공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해 왔다. 한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이 노동인구의 높은 교육·훈련 수준에 크게 좌우되었다면 이는 국가 이상으로 사적 가족들의 성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강렬한 교육열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현상이 최근에 발생했다. 대다수 가족에게 자녀 학교는 주거지 결정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며, (일류대학 진학률이 높은) ‘좋은’ 고등학교나 사설 학원들의 근접성은 대도시 주택가격의 핵심적 결정요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아도 2001년 말에서 최근까지 지속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의 폭등 현상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학군뿐 아니라 일류 입시학원예의 근접성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택 가격 폭등과 차이를 불러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남 주택시장 분석’이라는 2002년의 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된 서울 강남지역 가구주의 35.9퍼센트가 “교육여건 때문에 강남에 거주한다”고 답해 강남지역 거주 최대 이유가 교육이라는 세간 상식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켰다(『경향신문』, 2001/8/1). 생활편의시설(20.9%), 교통편의

9) 한국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첨단 정보·통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일원이 된 것은 기업, 정부의 적극적 투자도 중요했지만 이러한 고도 지식집약부문의 운영을 가능케 하는 풍부한 인적 자원의 존재를 무시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10) 필자는 이를 ‘산업화의 사회적 전환비용’(social transition costs of industrialization)으로 개념화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장경섭, 1995).

(19.8%), 주거환경(10.7%) 등의 여타 강남 거주 이유는 교육보다 뚜렷이 낮았다.¹¹⁾ 국내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서울 강남지역의 비교우위가 다른 아닌 교육이며, 그 지역의 주택(아파트)가격은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과는 상관없이 세계 최고 수준에 들어 있다는 사실이 국민적 특성으로서의 사회투자가족에 직결되어 있는 것 같다.

개별 가족들은 교육에 아낌없이 지출하고 정부는 좀체 경제사업으로부터 재정 자원을 재배치하려 들지 않는 가운데, 한국은 교육에 관련해 사비 지출의 공적 지출에 대한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¹²⁾ 예를 들어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1990-1995년 기간에 고등교육비의 사적 가족지출 비율이 다른 모든 회원국들보다 월등히 앞섰다(『한겨레』, 1998/11/25). 한국의 비율은 무려 80퍼센트 가량이었고, 2위인 일본의 비율도 50-60퍼센트에 그쳤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은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가 매우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적 기준으로 따져도 매우 잘 교육받은 노동인구를 형성시켜 세계인이 괄목상대하는 선진적 산업구조를 일굴 수 있었다(Matthews, 1995).

이처럼 개별 가족이 주도하는 교육투자는 정부의 교육투자에 비교해서 많은 함정과 부작용이 있다. 가장 중요하게는, 부유층 가족들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자녀의 과외공부와 해외유학까지 시킬 수 있지만 수많은 서민 가족들이 자녀의 학교 납입금도 제대로 내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다는 점이다(이순형·유정순, 1999). 기든스가 말하는 ‘가능성의 재분배’는 교육투자가 사적 노력에만 의존해서는 실현될 수 없다. 또한 많은 가족들은 지식 함양에 대한 투자와 자격증 취득에 대한

11) 같은 조사에서, 서울 시내의 또 다른 부촌으로 꼽히는 용산구 이촌동에서는 34.6퍼센트가 ‘편리한 교통’을 주거 이유로 꼽았고, 교육환경을 꼽은 비율은 9.0퍼센트에 불과했다.

12) 국가가 교육투자에 인색한 반면에, 여러 대기업들은 사원, 나아가 사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고 비용을 보조해 왔다(송호근, 1995). 물론 산업화 초기에는 그러한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재정적 및 기술적으로 고속 성장해 가면서 고등 기업인력 조달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펼치게 되었다. 여러 직원들은 졸업 후 일정 기간 이상의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국내외 대학에서 대학원 교육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다. 또한 기업복지 차원에서 직원 자녀들에게 등록금이 제공되기도 했다. 비록 이러한 혜택들이 일반적이지는 않았지만, 교육이 기업과 직원 사이를 잇는 중요한 사회적 고리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투자를 혼돈한다. 그래서 여러 상층 및 중산층 가족들은 오직 대학입시에만 써먹히는 내용의 개인 교습을 위해 엄청난 돈을 쓴다. 교육자격을 둘러싼 전쟁에서 자녀에게 대학입시를 위한 고비용의 전략적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가족들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단순히 많은 사회투자가족을 합해 놓는다고 건전한 사회투자국가와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

국가는 자체적 교육투자에 인색했지만 교육정책 자체를 등한시하지는 않았다. 거의 모든 정권이 교육정책을 경제정책 다음으로 강조했는데, 그 핵심은 대학입시 제도였다. 자녀나 자신의 (일류)대학 진학을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는 한국인들에게 입시제도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학계, 언론, 학부모까지 참여해 끊임없는 논란을 벌여 왔다(김경동, 1998).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해 정부는 대학의 입시제도에 대한 구체적 결정권한을 결코 포기하려 들지 않았다. 정부가 시민들의 학력투쟁을 둘러싸고 일종의 ‘입시경찰’로서의 권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그 역할은 정치권, 관료, 전문학자들의 업적주의와 인기주의로 인해 왜곡되어 비현실적이고 무원칙하고 끊임없는 입시제도 개폐를 야기해 왔다.

한국에서 국가의 사회투자가족에 대한 지원역할은 그 핵심이 직접적 교육투자보다는 고속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에 있었다. 이른바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의 이념적 지향은 복지보다는 한국형 워 페어(workfare)를 지향했다.¹³⁾ 빠른 경제성장은 빠른 일자리 확대를 가져와 전체 인구를 국가 경제발전의 과정에 동참시킬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고용은 개발국가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핵심적이며 거의 유일한 지원책이었다(Chang, 1999b). 일자리가 있는 한, 사람들은 그간 열성적 교육을 통해 축적한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었다. 기업차원에서는 안정된 고용조건, 특히 기술·관리직 노동자에 대한 중신고용이 해당

13) 일반적으로 워페어는 복지대상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여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미세한 노동(고용) 관련 보조나 지원을 포함한다(김태성·성경룡, 1993). 한국에서 이러한 의미의 워페어가 존재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거시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실업률을 최저화시키는 노력이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극빈층의 복지지원에 있어서도 가급적 노동과 연계시키려 해왔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워페어 정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들로 하여금 장기간의 교육투자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워페어의 핵심 요소인 직업능력 배양, 즉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국가 대신에 주로 사적 가족이 담당해 왔다. 다만 안정적이며 완전한 고용상태는 사회투자가족들이 산업 인적 자본의 형성과 향상을 위해 국가와 기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만드는 핵심적 전제조건이었다.

5.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사회투자가족의 위기

1) 유연노동시장과 한국형 워페어의 종언

노동시장 유연성은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정책관료, 경제학자, 고용주들에 의해 신자유주의의 최고 매력점으로 간주되어 왔다. 지난 김영삼 정부는 매우 편파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했다. 즉 정부와 기업의 구조개혁은 매우 피상적이고 소극적인 상태에서 방치하고 노동시장만 획기적으로 자유화시키려 들었다. 노동개혁을 위한 새 법규를 고안하고 통과시킴에 있어 김영삼 정부는 야당은 물론 노동자나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의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시민 동조와 언론 지지를 얻은 노동조합이 전국에 걸친 강력한 항의시위를 전개하면서 김영삼 정부는 정치적 존립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김영삼 정부는 경제적으로도 실패하게 되었다. 재벌개혁의 유기, 이미 과열인 경제에 대한 무모한 부양, 성급하고 준비 안된 금융개방 등의 문제들이 중첩되어 1997년 말에 전례 부채의 국가경제 붕괴사태가 벌어졌다.

세계 금융자본의 시각과 이해를 대변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한국경제의 철저한 구조조정을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급진적 노동개혁을 특히 강조했다.¹⁴⁾ 이미 통치기능을 상실한 김영삼 대통령 대신, 대통령 당선자 김

14) 노벨상 수상자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그의 저서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2002)에서 국제통화기금을 위시한 국제적 경제협력기구들이 실상은 서구 자본, 특히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여 세계 각국의 경제를 왜곡하거나 착취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한다.

대중씨가 나서 완강한 노동조합 지도부를 설득하여 고통분담 원칙하의 종합적 개혁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다(노사정위원회, 1998). 이렇게 해서, 기업 경영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대량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물론 정부와 기업 역시 자기 살을 깎는 철저한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고통은 결코 공정하게 분담되지 않았다. 이른바 ‘IMF 시대’ 첫 해인 1998년에 관한 공식 경제통계를 보면 대다수 한국 기업들은 국가경제 붕괴와 IMF식 고이자를 체제에 따른 전례 없는 어려움을 오직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에 의존해 대처했음을 알 수 있다(한국은행, 1998). 이와 대조적으로, 기업의 소유·경영과 정부 행정에 대한 구조개혁은 눈가림으로나 이루어졌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사실, 산업의 소유와 생산은 몇몇 초거대 재벌로 더욱 집중되어졌고 정부와 공기업 조직은 더욱 비대해지고 방만해졌다는 증거가 산재해 있다(Chang, 1999b).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도 경제침체와 맞물려 실업률 급상승, 고용조건 불안정화, 유능한 인력의 대규모 실망실업, 중간층 및 하층의 소득 급감 등을 야기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인들이 오래 의존해 온 특유의 워페어 체제에 중지부를 찍었다. 그렇다고 이를 대신해 복지국가 체제의 확립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IMF 및 세계 금융자본이 역설적으로 촉구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이른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경제적 유용성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을 나타냈고 실업인구에 대해 전례 없이 엄청난 액수의 지원대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료조직이 드러낸 관련 정책과제에 관한 심각한 무경험과 구조전달체계의 극심한 부패성으로 인해 김대중 정부의 대규모 실업대책은 실업인구 및 빈곤층에 대해 만족할만한 구제효과를 갖지 못했다(Chang, 1999b).

2) 사회투자가족의 투자 철회와 이탈

워페어의 종언은 사회투자가족의 재정적, 사회적, 도덕적 기초를 와해시키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이 적절한 사회보장 혜택 없이 일자리와 소득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이들 가족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그동안의 저축으로 목전 생계도 꾸리기 어려우면 아예 집을 팔거나 규모를 줄였고, 실직 남편 대신에 아내가 허드레 돈벌이에 나섰고, 대학생 자녀들도 학업을 중단하고 아르

바이트로 가구소득을 보충하려 했으며, 더러는 온 가족의 노동력을 주된 밑천으로 하는 장사를 시작했다(배준호, 1998; 장혜경·김영란, 1999; 김승권·이상현·양혜경, 1998). 이러한 집단적 사투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경제위기는 쉽게 극복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스트레스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가정폭력, 별거, 이혼, 자녀가출을 야기했다. 대다수 빈곤층 및 중산층 가족들에게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사람들을 더욱 당황케 만든 것은 자녀와 부모 자신의 교육에 대한 장기간의 고액 투자가 이제 더 이상 임금과 고용지위가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구조조정된 경제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들은 저급한 임시 서비스노동 등에 집중되어 별다른 교육·훈련 자격이 필요 없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인들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투쟁적 노력이 반드시 합리적인 가족전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 비유명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에서 학생들의 휴학과 자퇴가 심각한 규모로 늘어났다. 물론 경제위기 이전에도 이들 대학의 졸업생들은 안정되고 품위 있는 직장을 찾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이제 경제위기가 고실업과 불완전고용 체제로 귀착되는 상황에서, 고용주들이 별로 쳐주지 않을 대학 교육증서를 받기 위해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것이 무의미하게만 느껴졌을 것이다. 어차피 실직 등으로 곤궁에 처한 그들 부모들은 학비를 계속 부담하기가 어렵다. 가뜩이나 대학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 때문에 고민중인 군소 사립대학들은 경제위기로 인해 특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른바 일류대학들은 대학원교육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2001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모집에서 서울대학교조차 전공을 불문하고 거의 대학 전체에 걸쳐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졌으며, 마찬가지로 문제가 2002년에도 나타났다. 다른 대학들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했음은 물론이다. 대학과 대학원의 위기는 도시 빈곤층의 가정해체와 맞물려 중·고교의 교실붕괴로 이어졌다. 중·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까지도 경제위기와 가정해체의 결과로 급증한 일탈 청소년과 아동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불우 학생들에게 입시 위주의 교육체계는 심각한 스트레스 가중요인일 뿐이며, 마땅한 대안도 없는 교사들은 속수무책으로 교실붕괴를 목도해 왔다. 교육의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기능이 모든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급속히 해체되어 왔다.

이와 맞물린 충격적 사회현상으로 중산층 가족들의 이민행렬이 급속히 늘어났다. 고학력 중산층 노동자들이 한창 젊은 나이에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되거나 해고 위협을 받을 때, 그들은 심한 사회적 배신감을 느낀다고 한다. 자신이 어렵게 취득한 교육·훈련 자격이 고용주, 나아가 국가경제에 의해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는 느낌은 그들의 국가 소속감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힘든 교육투자뿐 아니라 한국에서 더욱 불투명한 경제적 미래를 맞게 될지도 모를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의 효용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극히 자연스럽다고 할 즉각적 반응이 공교육체계가 안정되어 있고 사회·경제적 생활환경이 안정된 나라들로의 이민행렬이다. 사회적 배신감과 불안감에 떠는 한국의 중산층 사회투자가족들에게 캐나다가 가장 인기 있는 행선지로 떠오른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사회투자가족의 이탈은 이른바 ‘교육이민’이라는 신조어를 통해 극명히 부각된다. 2001년 3월에 서울 코엑스에서 해외이주 및 해외유학 박람회가 동시에 열렸는데, 첫 주말에만 무려 5만여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한다(『경향신문』, 2001/03/04).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한국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폭증하는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많은 이민상담회사들은 이 행사에서 ‘교육이민 전문’이라는 광고를 내걸었다. 부모의 해외이주 동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자녀의 해외 유학이며, 중산층 사회투자가족들은 이러한 교육이민을 단순히 구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당수가 실행에 옮겼다. 물론 교육문제와 직업불안만이 이러한 이민 열풍의 원인은 아니다. 그러나 이 두 요인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를 이민 열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2000년 9월의 한 신문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8,892명의 응답자 중에 7,149명이 “기회가 오면 이민가겠다”고 대답했다(『경향신문』, 2000/09/27). 경제적 세계화를 가장 혹독한 형태로 경험한 한국의 사회투자가족들은 이제 한국을 떠나 세계를 향하고 있다.

3) 신자유주의 ‘교육대통령’의 딜레마

경제위기 자체뿐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책이 한국의 사회투자가족들에게 결정적 타격을 입혔음을 감안할 때, 김대중씨가 스스로를 ‘교육대통령’으로 내세우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임기 초기에 그는 가장 유능하고 신망있다

고 평가되는 참모를 교육부장관에 임명하였고 공적 교육투자가 국제적 수준에 이르도록 확대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그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해당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기도 했다. 대북포용정책과 경제개혁 다음으로는 교육에 대해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 관심이 표명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 한국인들이 경제위기에 못지 않게 교육위기에 불안감을 느끼고 국가교육체제와 정부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한꺼번에 상실한 현상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엄청난 당혹감을 줄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의 교육에 대한 강조는 아마 영국의 '제3의 길'에 나오는 사회투자 국가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얻었을 것이다. 기구 명칭까지 바뀌가며 교육을 인적자원 개발과 연계시키고 사회정책 전체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복지국가 대신에 사회투자국가를 확립해야 한다는 앤서니 기든스의 주장을 즉각 상기시킨다. 어떤 의미에서 사회투자국가 노선은 동아시아의 교육열을 본받으려 한 영국으로부터 한국에 역수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관심이 공적 교육투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 강화로 이어진다면,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 매우 타당한 정책이 될 것이다. 사회투자가족의 심화된 위기는 본격적 사회투자국가의 시급한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사회투자가족의 위기에 대한 비난을 나눠 들어야 하는 만큼 대안적 교육투자 장치를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김대통령이 실제 그러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는지 불분명하지만 현 정부는 임기 후반기 들어 집중적으로 교육재원 확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며(『교수신문』, 2002/5/27), 앞으로 수년간 더욱 빠른 속도로 공공 교육투자를 늘려 나가기 위한 재정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민, 언론, 전문가의 반응은 시큰둥하고 심지어 무관심한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요즈음 같은 극도의 국가재정 압박 상태에서 교육에 대해 획기적으로 정부 투자를 늘리겠다는 약속이 그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김대중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선택한 이른바 '지식기반경제'의 확립은 또다시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지식기반경제는 고부가가치 지식의 산출을 위한 고등 교육·연구에의 획기적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이전의 산업화 단계에서 강조되었던

대중적 교육수준 향상과는 차이가 있지만 한국인들은 21세기에도 또다시 교육을 국가적 화두로 맞게 되었다. 그러나 빈부격차의 급속한 확대와 사교육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그러한 국가적 화두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층의 비율을 어느 때보다도 제한하고 있다. 더우기 외국 자본의 전방위 진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소유·경영 세계화는 공식 교육체계 내에서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국제적 소양을 요구해, 이를 습득하기 위한 조기 유학, 해외 어학연수, 해외 대학 진학 등을 둘러싸고 계층간의 격차와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다.

김대통령에 대한 대중적 기억은 주로 경제 및 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 개혁(김영일, 2000)이 교육에 미친 재앙들과 연상될 것이다. 관료들의 간섭주의 성향은 김대통령이 임명한 교육부장관들의 신자유주의와 맞물렸다. 그 결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할 정도로 수많은 관료주의적 규제 하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동시에 강요되는 극도의 경쟁주의가 이들을 총체적인 의욕상실 상태로 몰았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그들 자녀의 교사조차도 도저히 설명 못할 정도로 일관성 없고 추상적인 교육개혁 정책들로 인해 심한 혼돈상태에 있다. 그들은 이제 자녀들의 교육경쟁 혹은 학력투쟁에 관련된 정책변수들이 전보다 훨씬 복잡다기해짐에 따라 거의 고문당하는 느낌을 갖고 살게 되었다. ‘교육망국’이라는 말이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에 붙어 다닌다. 설사 자녀가 어려운 입시경쟁을 헤치고 대학교육을 마치더라도 유연노동시장과 불안정한 경제구조가 그들을 기다렸다가 실업이나 고용불안정의 무시무시한 경험을 강요하게 된다. 수많은 중산층 가족들이 한국을 영구히 떠나기로 마음먹을 때,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전환에 따라 변질된 교육의(무)의미를 떠올릴 것이다.

6. 결론

한국의 경제발전은 부족한 부존자원과 자본을 풍부한 양질의 인적자원으로 메우며 이룩했다고 한다. 인적자원의 풍부함은 인구가 많고 생산연령층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지만 양질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우수한 민족자질을 반영한 것인가 아니면 국가나 기업의 적극적 인적투자의 결실인가? 기업 차원의 인적투자는 오

늘날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활발하지만 산업화 초기에 저임에 기반한 가격경쟁력으로 버티던 대다수 기업들에게 고령 사항조차 되지 못했다. 국가 차원의 인적투자는 산업화 초기는커녕 현재에도 극히 저조해 교육·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얼마 전에는 국제연합으로부터 한국의 공공 교육투자 부족이 저소득층의 인권 훼손을 야기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지적을 받았다.

양질의 인적자원이 우수한 민족자질에서 나왔다고 강변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인적투자를 중시하는 민족문화에 의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 차원에서 이루어진 자녀와 형제의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우수한 산업생산인력을 형성시켰다. 특히 산업화 초기에 대부분 산업인력이 이농인구로 채워질 때, 이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농가로부터 조달된 이른바 '향토장학금'은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니라 깊은 가족애의 표현이었다. 이에 대한 보은으로서 학업과 노동에의 매진은 당연했으며, 충실한 교육훈련과 강한 노동의욕을 갖춘 인력공급이 그렇게 가능했다.

영국 사회학자 앤터니 기든스는 '사회투자국가'를 블레어가 내세운 '제3의 길'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이는 국가의 사회적 투자가 교육 등 장기적 생산능력기반을 확충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한국정부도 적극 동조하는 생산적 복지론에 연계된 정책노선이다. 김대중정부가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적극적 교육투자를 구두로나마 내세우는 것도 이런 주장을 의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에서는 사회투자국가 대신에 일종의 '사회투자가족'이 자녀형제에 대한 적극적 교육·훈련 투자를 통해 생산능력기반을 확충해왔다. 산업화 초기에는 농민가족이 이농하는 자녀형제를 통해 이 역할을 수행했고, 이후에는 도시 중산층가족을 중심으로 자녀교육을 통해 같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국가적 자산인 사회투자가족이 최근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일부 중산층을 중심으로 더 이상 한국에서 사회투자가족 노릇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무의미해 차라리 이민이나 가겠다는 분위기이다. 자녀교육 문제로 이민까지 불사하겠다는 생각은 우선 학교폭력, 교실붕괴, 사교육과열, 대입훈련 등 교육현실의 일련의 문제들이 너무 심각해 도저히 불안하고 피곤해서 자녀를 여기에 두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상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교육투자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이다. 최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격랑 속에서 한국에 닥친 경제위기는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적투자를 소득기반으로 하는 계층을 희생시키고 자산소득자들에게 유리한 경제구조를 귀결시켰다(Chang, 1999b). 이른바 ‘IMF 경제위기’는 투자한 교육·훈련 자격을 내세워 안정된 고용조건을 보장받던 중산층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열풍 속에 투자비도 못 건지고 직장을 잃으며 신규 대학졸업자들은 실업인구로 자동 편입되는 상황이 한국을 교육투자 부적격국으로 만들게 되었다. 여유소득을 주로 자녀교육에 투자해 온 수많은 고학력 노동자들이 자신이 겪게된 직업위기를 자녀의 미래에 투영시켜 보고는 이민을 결심한다.

세계화는 이 땅에서 교육에의 투자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그 투자결과를 확신할 수 없도록 만들어 이미 수많은 한국의 사회투자가족들이 이국 땅에 발을 디뎠다. 그들은 이제 세계를 무대로 사회투자가족으로 기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능동적 선택이 아예 불가능한 수많은 빈곤층 가정에 대해서는 교육이 지난 세기와는 달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세대간 계층 상승이동을 위한 핵심적 가족전략으로서 기능하기 어렵게 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빈부격차의 심화, 사교육비의 급증, 공교육체계의 불안정 등은 한국의 빈곤계층과 관련해 사회통합적 경제발전을 추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20세기 중반 이후 대외종속적 근대화와 세계화의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국민적 특성으로 자리 잡은 사회투자가족은 세기말의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질서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 혼선이 이는 가운데 그 국민적 특성으로서의 성격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 『경향신문』.
- 『교수신문』.
- 구자역(1999), 《중국교육사》. 서울: 책사랑.
- 김경동(1998), 《한국 교육의 사회학적 진단과 처방》. 서울: 민음사.
- 김승권 · 이상현 · 양혜경(1998), 《여성실업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일(2000), 《위험한 실험: 교육개혁의 정치학》. 서울: 민음사.
- 김응석 외(1993), 《농촌가구의 구조적 특성과 가족부양체계》.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성 · 성경룡(1993), 《복지국가론》. 서울: 나남.
- 노사정위원회(1998), “노사정 공동선언문.” 1998. 1. 20.
- 『디지털조선일보』.
- 박길성(1996), 《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구조변동》. 서울: 사회비평가.
- 배준호(1998) “저소득층의 고용 불안에 따른 생활 변화.” <우리나라 가계의 생활실태 변화 추이>에 관한 통계청 세미나 발표논문. 1998. 9. 1.
- 송호근(1995), 《한국의 기업복지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이순형 · 유정순(1999), “한국 도시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건국대학교 한국한연구소 편, 《교육과 삶의 질》, pp.151-206.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 장경섭(1995), “가족농체제의 위기와 농촌개혁의 전망: 90년대 농촌현실의 사회학적 평가.” 《농촌사회》 5: 195-226.
- _____(2001), “가족이념의 우발적 다원성: 압축적 근대성과 한국가족.” 《정신문화연구》 24(2):161-202.
- 장혜경 · 김영란(1999), 《실업에 따른 가족생활과 여성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조동성(1991), 《한국재벌연구》.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조선일보』.
- 『한겨레』.
- 한국은행(1998), “1998년 상반기 기업 경영 분석.” 미출간 조사보고서.
- Amsden, Alice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hang Kyung-Sup (1997), “Modernity through the Family: Familial Foundations of Korean Society.”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7(1): 51-63.
- _____(1999a), “Compressed Modernity and Its Discontents: South Korean Society in Transition.”

- Economy and Society* 28(1): 30-55.
- _____(1999b), "Social Ramifications of South Korea's Economic Fall: Neo-Liberal Antidote to Compressed Capitalist Industrialization?." *Development and Society* 28(1): 49-91.
- _____(2001), "Compressed Modernity and Korean Family: Accidental Pluralism in Family Ideology." *Journal of Asian-Pacific Studies* 2001(9): 31-39.
- Giddens, Anthony (1998),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Cambridge: Policy Press.
- Japan Times*.
- Khan, Herman (1979), *World Economic Development: 1979 and Beyond*. Boulder: Westview.
- Lewis, W. Arthur (1954),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y of Labou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s and Social Studies* 22(1): 139-91.
- Matthews, John (1995), *High-Technology Industrialisation in East Asia: The Case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 Taiwan and Korea*. Taipei: 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 McCormick, Kevin (2001), "Post-war Japan as a Model for British Reform." G. Daniels, and C. Tsuzuki, eds., *The History of Anglo-Japanese Relations, 1600-2000: Volume 5, The Social-Cultural Dimension*. Basingstoke: Macmillan.
- Mittelman, James H. (2000), *The Globalization Syndrome: Transformation and Resist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ark, Mee-Hae (1991), Patterns and Trends of Educational Mating in Kore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0(2): 1-16.
- Robertson, Roland (1992),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Sage.
- Said, Edward (1979),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 Stiglitz, Joseph (2002),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Norton.
- Vogel, Ezra F. (1991), *The Four Little Dragons: The Spread of Industrialisation in East Asi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The Social Investment Family in Crisis:
Globalization, Family Culture, and Educational Credential Struggle

Chang Kyung-Sup*

South Koreans are well known for their educational enthusiasm. Many observers of South Korea rightly acknowledge that education has been a key factor for rapid economic development, democratization, etc. An interesting aspect of the South Korean educational fervor is the heavy public dependence on private educational investment. In this society, private families have spent on education at one of the highest levels in the world, whereas the state has invested in education at a level that even worries the United Nations as a *human rights issue*. I will address this matter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the social investment family, as opposed to the social investment state which is proposed by Anthony Giddens (1998) as a core scheme for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In the following, the concept of the social investment family will be brought in and compared with the social investment state as defined by Anthony Giddens. Then I will discuss the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in which private families came to recognize the prime importance of education in their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even political advancement. I will next appraise the recent economic crisis and the neo-liberal reform to cope with it as fundamental threats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investment family. Finally, Kim Dae-Jung's self-contradictory position as both neo-liberal reformer and "education president" will be appraised against the widespread public sense of educational crisis.

*Dep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Comparative modernities, Family policy, Chinese society.